

“지역신문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정부 올바른 인식·통큰 지원을”

발전기금 고갈...한시법 제도 개선 필요
정부광고 특정 언론 집중...공평 분배해야

참석자 명단

- ▲국회
△박병석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조경태 기획재정부위원장(자유한국당)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권상동 법제사법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유은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이상민 의원() △이현승 의원(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박대출 의원() △김재경 의원() △김기선 의원() △이철규 의원() △염동열 의원() △김기선 의원() △김석기 의원() △이완영 의원()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 ▲문화체육관광부
△나종민 1차관



19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이재근기자>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지역신문은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물론 중앙에 집중된 정책과제들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정부의 무관심, 지방신문발전기금의 한시성과 기금 고갈 등은 지역신문을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다.

독과점 지위를 획득한 포털사이트는 지역 뉴스의 노출을 배제해 지역 뉴스가 지역민에게 도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19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경고등'이 커진 지역신문을 진단하고, 지역신문이 단순한 지역 뉴스의 전달자가 아닌 지방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할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정부의 통큰 지원 이뤄져야=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등으로 지역신문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위기 정도는 깊고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정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두 차례 연장을 걸쳐 지원기간을 늘렸으나, 기금 고갈과 한시법이 품고 있는 소멸 위험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에 나선 김세연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지역신문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은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또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철수 신문협회 경영사업부장은 "기금의 소멸, 고갈로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며 "안정적인 기금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기금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매체로 인해 지원의 효율성은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언론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건강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중잣대 개선해야=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역신문은 산업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지역에 맞는 타당성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비전전라를 제시해 왔다"면서 "지역신문이 주는 균형발전 등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무관심, 또 지방신문 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의 이중잣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임철수 부장은 "예산당국의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은 낮다. 사기업(신문사)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냐고 질문한다. 거꾸로 보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언론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기금배정에 있어서는 사기업 논리만 내세운다. 올바른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국장은 정부광고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했다. 이 국장은 "객관적이고 공인된 발행부수가 있음에도 정부광고는 특정 언론에 집중돼 지방신문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광고집행을 정부가 방지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국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민간재단의 기자 해외연수 지원제도가 사라진 뒤 언론진흥재단의 연수통계를 분석, 해외 연수의 기회가 서울 언론사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 언론진흥재단인지 그 정체성을 묻고 싶다"면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언론 중심의 활동을 하는 언론진흥재단의 운영형태와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언론진흥재단인지 그 정체성을 묻고 싶다"면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언론 중심의 활동을 하는 언론진흥재단의 운영형태와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안치수 경남대 교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선정대상사는 공인인증마크를 받은 것이다. 이들 사에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부장은 신문협회가 운영하는 '신문광고 디지털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10여개의 문재인 대통령 취임공고를 했으나 지방사에 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국가가 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신문사 광고매출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시간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염동열 국회의원은 "지방신문의 자원 다양화 등은 결국 정치권의 지원이 해법이다"며 정치권에서의 지역신문 활성화방안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고, 김세연 의원 역시 "한국신문협회에서 좋은 안을 만들면 국회 논의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개헌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역신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스스로 살아갈수 있는 살림살이가 낙후해야 한다. 중앙이 다 가진 것을 지방에 나눠줘야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최두성·박성진 기자 mikypark@msnet.co.kr

“지자체도 지방신문발전기금 조성 참여해야”

지역신문 발전 방향과 현주소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지역신문 지원정책 강화방안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고갈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했다.

△지역언론 지원현황과 고갈되는 자원=지역언론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2005년부터 3년씩 기수를 명시해 2005년~2007년까지 1기, 이후 3년간 2기로 분류되는 식이다. 지난 해까지 총 4기의 기수별 지역언론 발전 계획이 실행됐고, 현 정부는 새로운 3개년 지원방안(5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같이 기수를 분류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터져나왔다. 정부가 공개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단계적 전략'에서 1기는 도입기, 이후로 안정기(2기)→발전기(3기)로 분류하고 2014년부터 3년간은 정착기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세미나 발제자인 안치수 경남대 교수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은 3년 기간의 한시법으로, 법안 일몰 때만 되면 연장시키는데 힘을 쏟는 등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하는 시기가 사실상 없었다"며 "정착기라고 정부가 명시한 기간은 정착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관련 법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새로운 도입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적기금 등에서 전입 검토

지원대상 선정 의무규정 필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3기까지 총 1069억원이 사업비로 집행됐으나, 지난 4기에는 303억원으로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 기수별로 살펴보면 특별법 제정 직후인 1기 때는 618억원이 집행됐으나, 2기 483억원으로 줄었고 3기에는 325억원으로 또다시 줄었다. 지원금 삭감 규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까지 진행된 4기에는 303억원에 불과해 1기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기금이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금 조성 관련법인 특별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4기까지 진행된 지난해까지 일몰과 연장을 4차례 거쳤다. 이 때마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금을 다른 기금과 통합하거나 삭감 카드를 꺼내 들었고, 어떻게든 연장을 해야 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 입장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기금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이 지금과 같이 한시법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3년마다 협상의 카는 정부가 쥐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신문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시사한 만큼 현행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만들어 지역언론 발전의 새지평을 열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지자체 지원 확대와 새 자원 모색=지방신문발전기금을 확충할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 지원 확대 방안은 지역 언론이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기능을 감안해 지자체도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 지자체의 시도 조례를 개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용성 교수는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해 지역언론발전기금 육성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별도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면 가능하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자 지정 방식도 현재의 임의 규정에 서 강제·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새로운 자원 확대 방안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2013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 조성을 기재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 등 각종 공적 기금에서 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법과 복권기금법 등 관련 법안의 기금 용도 조항의 지구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최두성·박성진 기자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땀방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